

# 개인·금융업계 ‘환호’... 국내 자금이탈 방지·불확실성 해소

### 금투세 폐지, 주식시장 구원투수 시장 기대감 속 투자 심리변화 주목 발표 후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증시 활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일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한 시장불확실성 해소에 환호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결정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 및 여당과 의견을 맞추자 국내 증시는 즉각 상승장으로 전환했다.



ChatGpt로 생성한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고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6.61(1.83%) 상승한 2588.97를, 코스닥 지수는 25.03(3.43%) 오른 754.08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 8월 2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03% 상승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같다. 폐지 소식 자체가 증시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원안대로라면 내년에 시행될 법이었기에, 연말에 빠져나갈 뻔했던 국내 자금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전산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것 같긴 하지만, 증시 부양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와 다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지 모르니 증권업계가 ‘미리 준비해왔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환영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분배금이 배당소득세로 과

세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조금 더 일찍 결정했다면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폐지되니 다행”이라는 반응이 공존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응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민주당,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 준비

>> 1면 '금투세 폐지 동의...'서 계속

### 금투세 폐지 후 주주총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로 시장 신뢰 회복 목표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이 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총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

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 총의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韓, 기후대응 안하면 GDP·물가에 ‘부정적’

### 한은, 기후변화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p)씩 떨어져 2100년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이 넘게 줄어든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황재학 수석조사역과 김현진 선임조사역, 김한나 조사역, 기상청(기후과학국) 이한아·심성보 기상사무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C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30년 이후부터 2°C로 억제할 경우(자연대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무대응)로 시나리오를 분류했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

능연구팀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리스크)→ 국내의 온도 상승·강수 피해 증가(만성리스크)→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급성리스크) 등의 경로로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1.5°C 이내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탄소가격(톤당) 150달러, 2050년에는 1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상승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고, 설비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연평균 기온은 21세기말(2081~2100년)에 현재(2000~2019년) 대비 6.3°C 상승하고, 강수량은 같은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전환·만성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기후대응에 적극적이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5°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탄소가격 등으로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회복해 2100년경 10.2%로

감소했다. 2.0°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6.3% 줄고, 2100년경에는 15% 감소했다.

대응하지 않다가 2030년부터 2.0°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17.3% 줄고, 2100년에는 19.3% 감소했다. 1.5°C로 대응하지 않는 한 GDP가 2050년 시나리오보다 2100년 시나리오에서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탄소가격 부담이 줄어 GDP는 2050년 경 1.8% 감소하지만, 2100년경에는 GDP가 21% 대폭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